

사회

국민생활	265
노동	271
보건·의약	276
환경	279
복지	284
보험	286
노인·여성·청소년	289
소비자 보호	293
재외동포·다문화	295
범죄	300
사건·사고	302

2016
연합연감

사회

국민생활

■ 가계동향

2015년 가계소득은 월평균 437만3천원으로 2014년 대비 1.6%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0.9% 증가했다.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이 1.6%,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등 수급자 확대로 이전소득이 9.4%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1.9% 감소했다.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6만3천원으로 2014년 대비 0.5% 증가(실질기준 0.2% 감소)했다. 주거·수도·광열(4.8%), 주류·담배(18.8%), 보건(3.6%) 등이 주로 증가했고, 교통(-3.7%), 의료·신발(-4.4%), 통신(-1.7%) 등에서 감소했다.

연간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1만원으로 2014년 대비 0.7% 증가했다. 경상조세(근로소득세 등) 지출은 13만9천원(2.0% 증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지출은 12만9천원을 기록(3.7% 증가)했다. 공적연금 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지출은 12만5천원(2.4% 증가), 가구 간 이전(경조비, 교제비 등) 지출은 21만2천원(0.2% 증가), 이자비용은 8만4천원(5.9% 감소)을 기록했다.

연간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356만3천원으로 2014년 대비 1.9% 증가했다.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100만원으로 5.6% 증가했고, 흑자율은 28.1%로 1.0%p 상승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2014년 대비 1.0%p 하락했다.

■ 소득분배

2015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14년 대비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 소비지출은 1, 2, 4분위에서 증가했다.

소득 증가율은 1분위(4.9%)가 가장 높고, 5분위(0.6%)가 가장 낮았다. 1분위는 근로·이전소득, 2분위는 이전소득이 증가했다. 3분위는 사업소득은 감소했으나, 근로·이전소득이 증가했으며, 5분위는 사업소득은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4분위(2.3%)가 가장 높고, 5분위(-1.3%)가 가장 낮았다. 4분위는 교통, 주거·수도·광열, 교육비 지출이 증가했으며, 3, 5분위는 교통, 의료 및 신발 비용이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4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들에서 감소했다.

소득 5분위 배율(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은 4.22배로 2014년 4.45배보다 낮고, 2003년 4.43배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분기 4.86, 2분기 4.19, 3분기 4.46, 4분기 4.37배로 1분기에 가장 높고 2분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소비자물가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에 비해 0.7%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2014년 대비 2.2%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014년 대비 2.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014년 대비 0.2% 하락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014년 대비 2.1% 상승했다.

(전년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물가지수	2.8	3.0	4.0	2.2	1.3	1.3	0.7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3.6	1.8	3.2	1.6	1.6	2.0	2.2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3.0	1.9	2.6	1.5	1.5	1.7	2.4
생활물가지수	2.1	3.4	4.4	1.7	0.7	0.8	-0.2
신선식품지수	7.6	21.3	6.3	5.8	-1.3	-9.3	2.1

지출목적별로는 2014년에 비해 주류·담배(50.1%), 음식·숙박(2.3%), 식료품·비주류음료(1.7%), 교육(1.7%) 부문 등은 상승했고, 교통(-7.8%), 주택·수도·전기·연료(-0.6%) 부문 등은 하락했다.

(% , %p)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기여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총 지 수 >	481	1000.0	4.0	2.2	1.3	1.3	0.7	0.7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4	139.0	8.1	4.0	0.9	0.3	1.7	0.23
주류 및 담배	8	11.8	0.8	1.5	1.7	-0.1	50.1	0.59
의류 및 신발	34	66.4	3.3	4.8	2.9	4.0	1.3	0.09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21	173.0	4.5	4.6	3.5	2.9	-0.6	-0.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	38.2	3.7	2.9	0.3	2.1	2.6	0.10
보 건	28	72.9	1.8	0.9	0.4	0.7	1.3	0.09
교 통	32	111.4	7.0	3.2	-0.5	-1.6	-7.8	-0.83
통 신	8	59.1	-1.7	-2.5	-0.1	-0.1	-0.2	-0.01
오락 및 문화	64	53.0	1.6	0.2	1.0	0.4	-0.5	-0.03
교 육	20	103.5	1.7	1.5	1.2	1.5	1.7	0.18
음식 및 숙박	42	121.6	4.3	1.2	1.6	1.4	2.3	0.29
가타상품 및 서비스	41	50.1	3.2	-3.2	0.5	3.1	2.7	0.13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2014년 대비 0.7% 하락했고, 서비스는 2014년 대비 1.8%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축산물 등이 올라 2.0% 상승, 공업제품은 석유류 등이 내려 0.2% 하락, 전기·수도·가스는 도시가스, 전기료 등이 내려 7.4% 하락했다. 서비스 중에는 집세는 2.5%, 공공서비스는 1.2%, 개인서비스는 1.9% 각각 상승했다.

(% , %p)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기여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총 지 수 >	481	1000.0	4.0	2.2	1.3	1.3	0.7	0.71
상 품	327	453.2	5.7	3.1	1.0	0.9	-0.7	-0.31
(농축수산물)	71	77.6	9.2	3.1	-0.6	-2.7	2.0	0.14
(공업제품)	252	326.6	4.9	2.8	0.9	1.3	-0.2	-0.07
(전기·수도·가스)	4	49.0	4.8	5.0	4.5	3.9	-7.4	-0.38
서 비 스	154	546.8	2.7	1.4	1.5	1.6	1.8	1.01
(집 세)	2	92.8	4.0	4.2	2.7	2.3	2.5	0.24
(공공서비스)	29	142.6	-0.4	0.5	0.7	0.8	1.2	0.17
(개인서비스)	123	311.4	3.7	1.1	1.6	1.7	1.9	0.60

■ 부동산

20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19만3천691건으로 2014년 대비 18.8% 증가해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주택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지방은 2014년 대비 각각 32.4% 및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2014년 대비 아파트는 14.0%, 연립·다세대는 33.5%, 단독·다가구는 25.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간 주택전월세거래량은 147만2천398건으로 2014년 대비 0.4% 증가해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5년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2014년(41.0%) 대비 3.2%p 증가해 월세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전월세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4년 대비 0.6% 감소, 지방은 2.4% 증가했고, 주택유형별로 보면, 2014년 대비 아파트는 1.2%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8% 증가했다. 임대유형별로 보면, 2014년 대비 전세는 5.1% 감소, 월세는 8.3% 증가했다. 2015년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7%로 2014년 대비 3.2%p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48.8%로 2014년 대비 1.7%p 증가했다.

2015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주택 3.5%, 아파트 4.9%)를 기록했으나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전세가격은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주택 4.8%, 아파트 7.0%)를 이어갔다.

특히 매매는 제주,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한데 반해 세종시는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고, 전세는 수도권 재건축이 주수요 및 지방의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조로 인한 외부 이주 수요 증가로 부산, 대구, 광주에서 상승폭이 높게 유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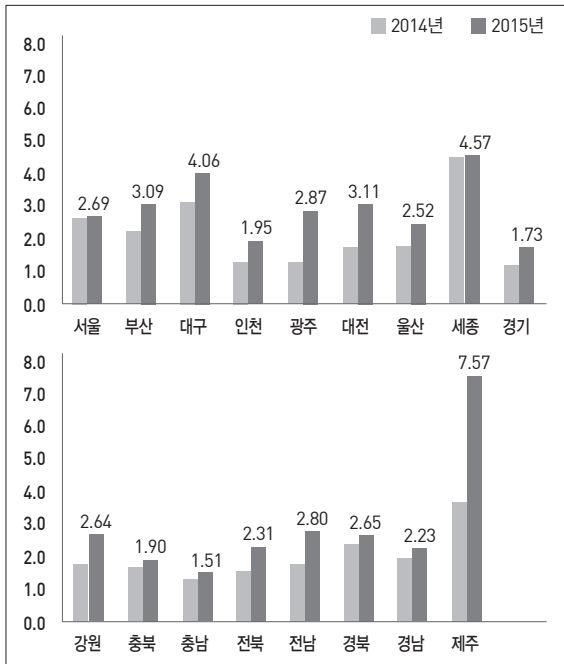
2015년 전국 지가가 2014년 말 대비 2.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가가 하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2.19%, 지방은 2.77% 상승해 지방의 상승폭이 수도권보다 컸다.

수도권은 서울(2.69%)이 2013년 9월부터 28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나, 경기(1.73%), 인천(1.9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은 제주가 7.57%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세종(4.57%), 대구(4.06%)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귀포시(7.97%)가 제2공항 발표(11월),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제주시(7.32%)는 제2공항 후보지 인접지역 등 투자수요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강화군(0.55%)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 연간 지가변동을 추이(%)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2.74%), 계획관리지역(2.39%), 공업지역(2.11%) 순으로 상승했다. 모든 이용상황별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주거용(2.68%), 전(2.38%), 기타(2.31%)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308.7만 필지로 2014년 대비 16.8% 증가해 20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 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12만 필지로 2014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77.5%)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이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3.1%), 개발제한구역(21.3%) 순으로 증가했으며, 이용상황별로는 대지(19.5%), 임야(15.5%), 기타(14.3%) 순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건설 실적

2015년 주택건설(인·허가 기준)은 전국 76만5천 호로 2014년 51만5천 호 대비 48.5% 증가했다(2012년 58만7천 호, 2013년 44만 호, 2014년 51만5천 호).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이연·유보됐던 사업물량이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인·허가는 그간 지연물량 해소, 택지부족 등으로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수도권(40만8천773호)은 서울(55.2%), 인천(125.2%), 경기(69.8%)가 모두 실적이 증가해 2014년 대비 69.0% 증가했다. 지방(35만6천555호)은 부산(동래)·충북(청주)·전북(전주)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해 2014년 대비 30.4%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파트(53만4천931호)는 2014년 대비 53.9% 증가

했고, 최근 3년 평균(2012~14년, 33만4천호) 대비로는 60.1%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23만397호)은 2014년 대비 37.5%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2012~14년, 18만호) 대비로는 28.1% 증가했다.

주체별로 공공(7만6천428호)은 2014년 대비 20.7%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2012~14년, 8만4천 호) 대비로는 9.2% 감소했다. 민간(68만8천900호)은 2014년 대비 52.4%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2012~14년, 43만 호) 대비로는 60.2% 증가했다.

규모별로 소형(41.8%), 중형(46.9%), 대형(67.2%) 모두 증가했으며, 85㎡ 이하 비중은 81%를 차지했다.

■ 인구이동

2015년 인구이동자 수는 775만5천 명으로 2014년 대비 1.7%(12만6천 명) 증가했으며 2013년(741만 명)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5.2%로 2014년 대비 0.2%p 증가했다.

시·도내 이동은 전체 이동자 중 67.1%(520만4천 명), 시·도간 이동은 32.9%(255만1천 명)를 차지했다. 시·도내 이동률은 10.2%, 시·도 간 이동률은 5.0%로 2014년 대비 각각 0.1%p 증가했다.

연령별 이동률은 30대(22.3%)와 20대(22.0%)가 가장 높았다. 이동자의 중위연령은 2015년 33.6세로 2014년 대비 0.5세 증가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 15.5%, 여자 15.0%로 남자가 여자보다 0.5%p 높았다.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29.0%), 제주(2.3%), 경기(0.8%) 등 9개 지역이었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1.4%), 대전(-1.4%), 광주(-0.6%) 등 8개 지역이었다.

서울 전출자의 60.2%는 경기로 이동했으며, 세종 전입자의 36.8%는 대전에서 이동했다. 경기, 세종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서울·부산·대구는 30~70대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다.

4개 권역 중 중부권(4만9천 명)은 순유입, 수도권(-3만3천 명), 영남권(-2만2천 명), 호남권(-8천 명)은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0~20대만 순유입, 중부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2013년 순유출로 전환한 이후 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부산 강서구(16.3%), 경기 하남시(11.0%) 등이며, 순유출률이 높은 시·군·구는 서울 강동구(-4.4%), 대전 동구(-2.8%) 등이다.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43.9%), 가족(23.2%), 직업(21.2%) 순이었다. 시·도내 이동의 주된 사유는 주택(53.2%)이 많고, 시·도 간 이동사유는 직업(33.9%)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 경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이었고, 제주와 충남은 직업이었다. 서울, 대전의 주된 순유출 사유는 주택이었고, 광주와 대구는 직업이었다.

■ 건강보험

2015년 3분기 기준 의료보장 인구는 5천196만 명,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45만 명으로 97.1%,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 152만 명으로 2.9%를 차지한다.

직장건강보험 적용인구는 3천633만 명으로 전체 72.0%를 차지했으며, 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 수는 1.32명이다. 지역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천411만 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0.89명이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18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했으며 2014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33조7천830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는 28조1천64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3.4%를 차지했고, 지역보험료는 5조6천189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5천810원이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0만2천723원을, 지역가구의 경우 월평균 8만천876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또한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4만3천699원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2010년 61.6%에 비해 2015년 3사분기 67.6%로 6.0%p 증가했고, 보험료 부과금액 중 직장가입자의 구성비도 2010년 77.6%에서 2015년 3사분기 83.4%로 5.8%p 증가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비중과 보험료 부과금액 구성비 모두 감소했다. 한편 부양률(가입자 1인당 가구원 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2조8천472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7.9%인 16조2천47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동기 대비 9.8%,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만4천421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했다.

전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 수는 1.62일로 나타나, 2014년 동기 대비 0.01일 감소했다.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33조8천74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97.3%를 차지하는 요양급여비·건강검진비 등 현물급여비는 32조8천818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고, 요양비·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비는 9천259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는 32조725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요양기관은 8만8천123개로,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92개, 병원 1천500개, 요양병원 1천347개, 의원 2만9천443개를 비롯, 치과병·의원 1만6천741개, 한방병·의원 1만3천873개, 조산원 35개, 보건기관 3천484개, 약국 2만1천365개였다. 특히 한방병원은 2014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약국은 1.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를 조정으로 2016년도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는 직장가입자가 9만7천630원에서 9만8천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8만5천13원에서 8만5천778원으로 6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먼저, 20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기로 했다.

2016년 수가는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 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20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 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

2015년 1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2천159만 명으로 사업장가입자가 1천279만 명, 지역가입자가 834만 명,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각각 23만8천 명, 21만7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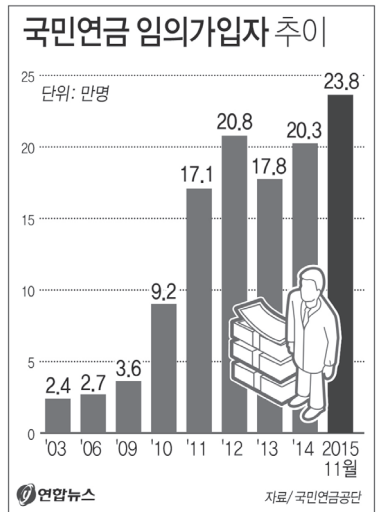
2014년 말 대비 전체가입자는 46만8명(2.2%), 사업장가입자는 48만5천명(3.9%) 증가했

나, 지역가입자는 10만1천 명(1.2%)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3만5천 명(17.4%), 임의계속가입자는 4만9천 명(29.3%) 증가했다.

수급자는 399만 명으로 2014년 대비 23만8천 명(6.4%) 증가했다. 연금(노령·장애·유족) 수급자는 381만 명으로 22만 명(6.1%) 증가했고,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13만 명으로 18만3천 명(6.2%) 증가했다. 일시금 수령자는 18만 명으로 1만8천 명(10.2%) 증가했다.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35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지급액은 187만원이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기금운용(투자)금액은 506조7천억원으로 2014년 말 대비 36조9천억원(7.8%)이 증가했다. 금융부문에 505조3천억원으로 99.7%가 투자되고 있다. 금융부문 중 채권에 288조4천억원(57.1%), 주식에 164조8천억원(32.6%), 대체투



자에 51조원(10.1%)을 투자하고 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4.24%, 운용수익금은 20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5.37%, 국내채권 3.95%, 국내대체투자 5.25%, 해외대체투자 4.96%를 보였고, 국내주식은 4.83%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12~14년) 연평균 수익률은 5.42%, 최근 5년간(2010~14년) 연평균 수익률은 5.64%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주에게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2016년도부터는 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사중손실은 최소화하되 기존 혜택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수준은 40%로 소폭 조정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는 2015년 12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년)을 확정했다.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시도를 했다.

3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45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에는 3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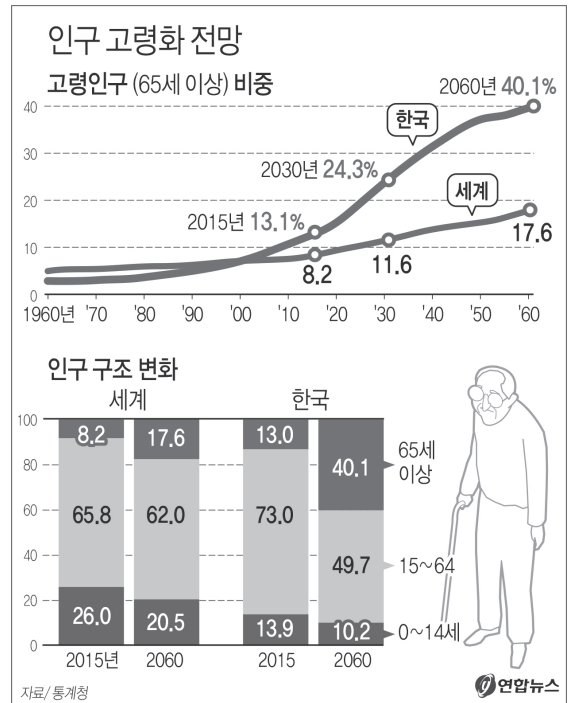
저출산 대책으로는 첫째,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행복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만혼대책 강화이다.

둘째는 난임부부 지원, 행복출산패키지를 통한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지원, 입양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등 사회책임 실현이다.

셋째, 맞춤형 보육체계, 어린이집 확충, 돌봄지원 체계강화 등의 교육개혁이다. 넷째는 남성육아휴직,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첫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강화,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이다. 둘째는 건강생활 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등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마련이다.

셋째, 2030년 노동력 부족 본격화에 대비해 여성고용,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이다. 넷째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인구다운사이징 대비를 강화해 고령친화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지역·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홍보·인식개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평가·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자체 대응 목표를 세우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규모는 2015년 32조6천억원에서 2020년 44조5천억원으로 11조9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정부는 2015년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배경으로는 저성장 기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우려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둘째,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셋째,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이다.

먼저 단기 고용충격 완화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지원,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에는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1만5천 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천500명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천 명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연 1만 명 규모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청년인턴제를 연 5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양질의 직업훈련을 연 5만 명에게 확대 제공한다.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에는 임금피크제 확산,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등이 있다.

둘째 현장 중심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일학습병행제 확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추진계획 확정 등을 통해 현장 중심교육 및 대학구조 개혁을 진행한다.

또한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기능요원(보충역)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K-Move 사업 재정비 등을 통해 해외 취업을 연 1만 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 상환 등 구조 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 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위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황을 보면, 가계부채가 과거 9%대에서 6%대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안정화됐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2015년 3월 말 1천99조원).

다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15년 3월 말 375조원) 위주로 증가했고, 안심전환대출(32조원)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며 과거보다 대내외 변동에 대응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강화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 시스템화하고,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 심사 방식 개선이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 시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심사하기로 했다.

셋째,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강화이다.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객관성 제고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의 단계적 저율과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2금융권의 신용

대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넷째,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이다.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충격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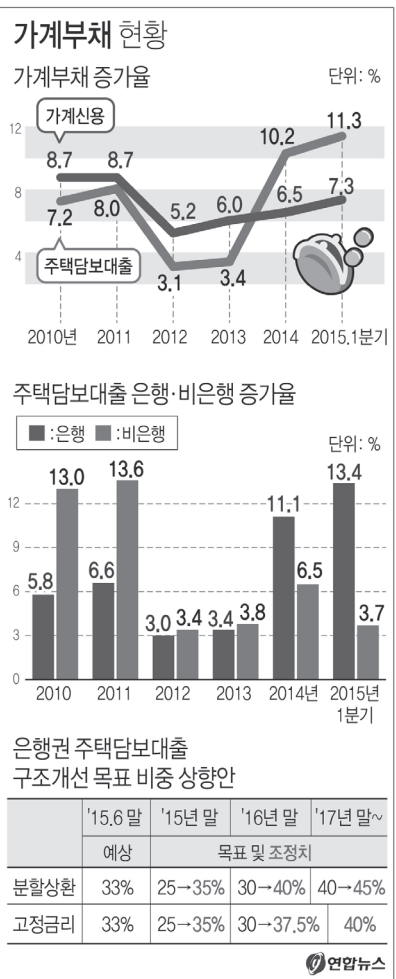
상기 대책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 과열 등 거시경제 또는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경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지원

정부는 2015년 6월 23일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했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퀴드림론)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정책방향은 첫째,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둘째,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셋째,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이다. 이에 대한 7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이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5년간(2016~20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현재 연 4조 5천억원(47만 명)에서 연 5조7천억원(매년 60만 명 수혜 예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둘째,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지원 강화이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한도(월 한도 5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셋째,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이다. 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이다. 정책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고, 은행과 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다섯째,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이다.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채무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섯째,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60%로 상향하고(현행 50%),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총 62만 명에게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 명의 이자부담(4천6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가 2016년 3월 시행된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

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ISA의 가입자격은 가입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미 상당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ISA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천만원(총 1억원)이며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천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ISA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운용하는 경우 예금, 펀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계좌 유지기간(5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지원은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9.9%)로 차등화한다.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상품별 투자 (세율 15.4%)	과세 기준 300만원×15.4%= 세금 46만2천원
ISA 내 투자 (세율 9.9%)	과세 기준 10만원×9.9%= 세금 9천900원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 제외)
→ 45만2천100원의 절세효과 발생	

금융기관(신탁업자)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제시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

■ 개요

2015년 국내 노동계는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여느 해보다 격렬했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2014년 9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연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했으나, '일반하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깊어졌다.